모두의 '성장'이냐 '빚'이냐… 820조 예산안 놓고 여야 대립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민주, 양극화 해소 위한 투자 강조
정부 "향후 2~3년 적극적 투자 필요"
국힘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정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처 수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열린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로 이어질 동력을 확보하는 안이라는 민주당과,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물려주는 안이라는 여야 주장이 엇갈렸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한민국 거시경제 회복을 '위대한 대(大)반등'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성장이 세수를 늘리고, 늘어난 세수가 미래 성장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으로 고통받았는데, 이 늪에서 벗어나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고인 12.8%로 책정한 것은 고도성장과 K-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자는 동력을 재정에서 뒷받침하자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업의 성장 관련 부분은 좋은 상황이나, 소상공인이나 개인의 성장 관련 부분은 소비가 진작돼야 해서 재정을 확장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산업, 연구·개발, K-컬처 분야에 예산액 편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을 두고 국가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하는 경쟁 시대에서 초과 세수로 인한 투자 여력이 있을 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 체질, 규모 확장 등 개선이 어렵다고 본다"며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세수 결손 사태로 민생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국회를 우회해 기금을 썼다며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 장치'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봤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수는 변동성이 커서 있는대로 쓰다보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기 어렵다"며 "그래서 만든 것이 미래대응기금이고 IMF(국제통화기금)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160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정부는 나라빚은 106조원을 더 내겠다고 한다"며 "162조원 규모 미래펀탄기금을 쌓아 만들어서 104조원을 쌓아두겠다고 한다. 국민 명의의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 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나 의원은 "나라 빚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의 빚인가. 우리 아이들의 몫 아닌가"라며 "이자만 한 해에 40조원이다. 총선용 현금 살포,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 부채를 물려주는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 학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의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빛이 되는 그런 나라 살림을 편성했다"며 "그것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렇게 재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규모 세수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는 빚을 갚고, 불황일 때는 돈을 써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이 미래를 위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이 아니라 한 마디로 살포해서 없어지는 돈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총리는 "호황일 때 빚을 모두 갚느냐가 정답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도 있고, 생각도 다르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김민석 사과 놓고 민주당 계파 갈등 재점화

친청계 "공개 사과하고 책임져야"
박성준 대변인 "질서있게 문제 처리"

전날(3일) 자신이 전당대회 전후 제기한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제3자 비밀연합'의 근거가 없었다고 말하며 의원들에게 사과한 김민석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지지자를 대상으로 추가 사과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에게 모욕 받고 상처 받은 당원과 지지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책임을 지라며 공개 요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에서 맨 마지막에 발언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대로 당 내 종교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겠다"고만 말했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는 박선원 당원 조사 TF(태스크포스)단장의 신천지 교인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 발표 전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 본의 아니게 피해 입은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청계 최고위원은 전날 김민석 대표의 사과를 언급하며 당원과 지지자를 향한 공개 사과와 정당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원래 3자 비밀연합이 없었는데, 무슨 증거가 나오나"라며 "근거 없이 몰아세워 당원들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견뎌야 했고 당원 사이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과 상처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스스로 제기한 신천지 관련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당원에게 밝혀야 한다"며 "낙인 찍히고 당원과 정청래 전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법 52조에 따르면 당 대표 경선 등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근거 없는 3자 비밀연합 의혹이 어떤 목적과 근거를 갖고 왜 공표했는지 정당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당 대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친청계를 향해 '당 대표를 흔들지 마라'고 주장하는 친명(친이재명)계를 향해 가해 행위를 멈춰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의 전날 사과 외에 김 대표가 책임을 질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 이후 집권여당으로 책임 있게 나가야 하는건데, 당 내 문제가 확전돼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당은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천지 보고 관련해선,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 예고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발표
"925조 예산, 전례없는 기형적 규모"
미래대응기금 104조 전액 국채 상환"

국민의힘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과 현금성 지원 사업 등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고스란히 고려하면 내년 실제 예산안은 올해보다 무려 27.1%, 금액으로는 197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925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초대형을 넘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규모"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한쪽에서는 국가채무를 107조원이나 늘려놓았다"며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한다고 국채 발행, 세수가 안 좋아도 국채 발행, 세수가 좋아도 국채 발행"이라며 "도대체 국채를 언제 갚아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재옥 의원은 "정부는 배분될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 수입으로 가로챘으나,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지출은 고작 15조3000억원에 불과해 15조2000억원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 시도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광주·전남에만 통합 명목으로 3조5000억원을 몰아줬다"며 "30조500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공정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특정 세력에 편중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삭감 대상으로는 ▲협동조합사업 ▲사회연대경제사업 ▲기본사회위원회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사업 ▲프론티어급(세계 최고 수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등을 꼽았다.

박수영 의원은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 준비가 미흡한데도 규모를 늘린 예산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등 각종 펀드 ▲전기차 보급사업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석유 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등을 언급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특검법' 상정

野 "李 대통령 구하기 법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된 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전날(3일)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추진 및 처리에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과 자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특검법'으로 부르는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조작기소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이뤄진 수사권·공소권 오·남용행위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였다는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게 하는 내용이다.

수사 범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사업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소취소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특검이 아니다.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설 탐정소, 개인 로펌"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기소 자체를 없애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소위는 오후 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를 노리는 민주당은 곧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